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

박정화 부연구위원

CONTENTS

I. 연구 배경	1
II. 재정운용 현황 및 체계	2
① 재정여건 및 전망	2
② 국가재정운용의 법적 체계 및 제도	3
③ 중·장기 재정운용 추진 및 관리 현황	4
III.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	8
① 국내	8
② 주요국	10
IV. 결론	18
참고문헌	19

연구 요약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등으로 인해 미래 재정지출 압력이 증가

- 우리나라 역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재정지출 확대)과 함께 증가하는 국가채무의 관리 부담이 공존하는 상황
 - 이에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재정관리의 실효성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분석 결과

주요국의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재정전망 근거 여부, 빈도·주기, 기간·방법, 주체 및 관련 거버넌스 구조 등 상이
 - (국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 재정운용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5년 주기/40년~} 장기재정전망(제3차, '25년 9월 발표)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토
 - (국외)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및 EU는 중·장기 재정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각 전망 주체를 중심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

시사점

중·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의 재정전략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객관적인 전망과 정책 연계를 통해 활용될 필요

- 아울러 해외사례를 참고한 진단 지표 발굴 및 전망방식 고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등으로 인해 미래 재정지출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¹⁾

- 우리나라 역시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재정지출 확대)과 함께 증가하는 국가채무의 관리 부담이 공존하는 상황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음**

* '23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IMF, '24.10) : (韓) 51.5 (美) 118.7 (日) 249.7 (獨) 62.7

** 국가채무비율 전망 : ('30)55.3 → ('40)80.3 → ('50)107.7 → ('60)130.6 → ('72)173.0²⁾

□ 이에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재정관리의 실효성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5년) 재정운용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
- 나아가 올해 9월에는 제3차 장기재정전망(「국가재정법」 제7조)*을 통해 장기적 측면(40년 이상~)의 재정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표³⁾

* 발표 주기(5년) : 제1차('15.12월, 최초) → 제2차('20.9월) → 제3차('25.9월)

□ 본 보고서는 재정진단 방법의 하나로 주요국의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함

1) IMF('25.2)는 “고령화 등 미래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며, 피치('25.2)는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 증가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된다고 밝힘(기획재정부, 2025.3).

2) 국회예산정책처(2025)

3) '25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을 바탕으로 전망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 제고 예정임을 밝힘(기획재정부, 2025.1)

1. 재정여건 및 전망

□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등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⁴⁾

- 우리나라는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함⁵⁾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⁶⁾

* 한국 : ('00년) 고령화(7.2%) → ('18년) 고령(14.3%) → ('24.12월) 초고령화(20.0%)

- 코로나19 당시 증가한 재정지출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⁶⁾

- 지난 10년('16년→'25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수입은 40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재정지출은 384.9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증가

- 이 과정에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에서 △73.9조원으로 증가

- 한편, 국가채무 규모는 626.9조원에서 1,273.3조원으로 증가

〈표 II-1〉 주요 재정지표 및 재정운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재정수입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573.9	612.2	651.6
재정지출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56.6	673.3
통합재정수지	16.9	24.0	31.2	△12.0	△71.2	△30.5	△64.6	△36.8	△44.4	△21.7
관리재정수지	△22.7	△18.5	△10.6	△54.4	△112.0	△90.6	△117.0	△87.0	△91.6	△73.9
국가채무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7.4	1,126.8	1,195.8	1,273.3

주: 2023년까지 결산, 2024~2025년 본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4) 기획재정부(2025.3)

5)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14%, 20% 이상일 때 각각 고령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며, 대한민국은 지난 '2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약 1,024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명)의 20%에 해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함(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2024.12.26.)

6) 국회예산정책처(2025)

□ 한편, 정부 예산규모는 '25년 1차(5.1일) 및 2차(6.19일)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최종 703.3조원에 달하며⁷⁾, '26년에는 약 7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수립된 최근 중기전망('25~'29년)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하고 재정부지출은 5.5%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

2. 국가재정운용의 법적 체계 및 제도

□ 국가예산안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

- 재정당국은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혁신 추진 방향의 하나로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언급⁸⁾
 - 이 과정에서 미래 재정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장기재정전망'을 활용
-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전망은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을 전망하고, 정책 방향의 설정과 전략 구체화의 근간

〈표 II-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과 첨부서류

구성(총 5부)	내 용	첨부서류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제2부 경제·재정운용 여건 제3부 재정운용 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5부 재정혁신 방향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2.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국가채무관리계획 4.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5. 장기재정전망 -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 **(중기)** 매년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재정지표를 이용해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약 5년간의 거시·경제에 관한 중기전망을 제시
 - 중·장기 국가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의 편성은 재정 및 예산관리 측면에서 중요

7) 정부는 지난 5.1일과 6.19일 각 1차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기획재정부, 2025.5; 2025.6)

8) 기획재정부(2025.8)

〈표 II-3〉 중기 재정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구분	특징	세부 내용
개념 및 성격	재정관리 측면	- 능률적인 재정계획과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파악 - 중점적 집행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목표와 방향을 제시
	예산관리 측면	- 중기(3-5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을 보완 - 재원의 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 -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이 강함
필요성	단년도 예산 및 재정운용의 한계를 극복	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파악 용이 ② 재정운용의 합리성 제고 ③ 재정의 책임성과 국회의 재정권한 강화

자료: 김용식(2018)의 자료를 재구성

- (장기) 국가재정운용의 틀과 시계를 5년 단위 중기에서 향후 40년간의 장기로 확장해 수행한 전망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 2015년 최초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자 현재의 재정상태와 정부 정책 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미래의 재정상태를 점검

3. 중·장기 재정운용 추진 및 관리 현황

1) 중기

□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제도적 발전과 목표관리 변화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흐름 파악이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06년) 이후, 근거법인 「국가재정법」 개정('10년)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

〈표 II-4〉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변동 사항

개정 사항	세부 내용
산출근거 제시	- 일부 재정목표 전망치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 (예) 재정규모 증가율 →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
첨부서류 제출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 사항 및 요인 등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회 보고	국회 제출 전 재정규모, 재정수지, 자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을 국회에 120일 전에 보고

자료: 김용식(2018)의 자료를 재구성

-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규정은 강화되었으며, 중기 재정관리 지표는 재정운용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

- 지난 16년간의 중기 재정관리 현황은 ①재정규모 확장 및 재정수지 악화, ②재정운용 목표 수준의 완화, ③계획기간 내 국가채무비율의 관리 수준 변화 등으로 나타남⁹⁾

〈표 II-5〉 2010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 재정관리 현황

(단위: %)

구분	재정수입·지출 증가율			재정운용 목표		국가채무비율 관리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A)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B)	차이 (A-B)	관리재정수지 (%)	국가채무 (%)	초반 (%)	후반 (%)
2010-2014	7.7	4.8	2.9	'14년 균형	30%대 초반	36.1	31.8
2011-2015	7.2	4.8	2.4	'13년 균형	20%대 후반	35.1	27.9
2012-2016	6.3	4.6	1.7	점진적 개선	30%대 이내	34.0	28.3
2013-2017	5.0	3.5	1.5	'17년 균형	30%대 중반	34.3	35.6
2014-2018	5.1	4.5	0.6	점진적 개선	30%대 중반	35.1	36.3
2015-2019	4.0	2.6	1.4	점진적 개선	40%대 초반	38.5	40.5
2016-2020	5.0	3.5	1.5	단계적 회복	40%대 초반	39.3	40.7
2017-2021	5.5	5.8	△0.3	△2% 내외	40%대 초반	40.4	40.4
2018-2022	5.2	7.3	△2.1	△3% 이내	40%대 초반	39.5	41.6
2019-2023	3.9	6.5	△2.6	△3% 중반	40%대 중반	37.1	46.4
2020-2024	3.5	5.7	△2.2	△5% 후반	50%대 후반	39.8	58.3
2021-2025	4.7	5.5	△0.8	△4% 이내	50%대 후반	47.3	58.8
2022-2026	6.6	4.6	2.0	△2% 중반	50%대 중반	50.0	52.2
2023-2027	3.7	3.6	0.1	△2% 중반	50%대 중반	50.4	53.0
2024-2028	4.6	3.6	1.0	△2% 중반	50%대 초반	47.4	50.5
2025-2029	4.3	5.5	△1.2	△4% 초반	50%대 후반	48.1	58.0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9) 〈표 II-5〉의 '중기 재정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재정수입 증가율 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율 증가 : 재정수입 증가율은 7%대에서 4%대로 감소하고, 재정지출 증가율은 4%대에서 7%대까지 증가하다 5%대로 감소, ②재정운용 목표 수준 완화 :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수지균형 목표를 시작으로 '20~'24년 5% 후반에서 '25~'29년 △4% 초반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초반을 목표로 하다가 '15~'19년 40%대에서 '20~'24년 50%대로 늘리는 등 관리 수준을 완화, ③국가채무비율 계획기간 관리 수준 : '12~'16년까지 계획기간 초반에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후반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3~'17년부터 초반부터 후반까지 채무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리

2) 장기

□ 재정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매년 발표되는 중기전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성 진단 수단인 ‘장기재정전망’을 실시¹⁰⁾

- (목적 및 의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전망하여 미래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의
- (추진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40년 이상 기간의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¹¹⁾

〈표 II-6〉 「국가재정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③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④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결과

제7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예산안과 함께 국회 의무 제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추진경과 및 동향) '15년(1차, 최초)과 '20년(2차)에 이어 '25년 9월초에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여 국회에 제출

〈표 II-7〉 장기재정전망 추진 경과

일 자	2015(1차)	2020(2차)	2025(3차)
발표 시점	2015년 12월	2020년 9월	2025년 9월
중기 계획	2015-2020년	2020-2024년	2025-2029년
근거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법정서류 X)	국가재정법 제7조(법정서류 O)	국가재정법 제7조(법정서류 O)
전망 기간	2016-2060년	2020-2060년	2025-2065년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 참고

10)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수립되며, 이를 장기(30~50년)로 확장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정보 생산을 수행하는 것이 장기재정전망임(박노욱, 2022).

11) 장기재정전망은 지난 '20년 3월부터 법률상 의무화가 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제출 중이며, 시기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2006. 10. 4.)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이 포함되도록 규정, ②(2010. 12. 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 구체화, ③(2020. 3.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장기재정전망의 법적 근거가 법률로 상향

- 한편, 재정전략회의와 관계부처 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의 추진을 알림

〈표 II-8〉 중·장기 재정전망 관련 논의 사항(일부)

일 자	회의명	주요 안건 및 내용
'11.06.22.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장기재정전망	▶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체계 마련 필요 - (안건) 장기재정전망 및 개선방안, 장기재정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점검,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 체계 구축방안 논의
'11.12.27.	제1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개최	▶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위한 협의회 운영 계획 및 추진방향 - (안건) 협의회 구성, 전망 주요전제방법, 분야별 전망 지침 마련 등
'24.09.08.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 (안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방안 등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 • '25년 관리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준칙을 준수 • '28년 국가채무비율 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실시
'24.12.17.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부담금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재정운용전략위에서 논의 - 국가재정법에 따른 「'25년~'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과 「'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 추계지침」 차질 없이 마련
'25.02.22.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산출기반 강화 지속 추진 - (안건) 제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현황 및 계획, 재정통계 산출기반 강화 등 - 제3차 장기재정전망 실시 → 올해 9월 국회 제출 •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 제고 • 주요 재정 분야별·기관 전망작업 공통적용 지침 확정 • 인구·거시경제변수 전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예정

주: 기획재정부 공개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하여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 참고

1. 국 내¹²⁾

□ 국내 장기재정전망은 5년간의 중기전망 결과와 연계하여 약 40년간의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매년 9월에 발표되는 예·결산 부속서류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중

- 장기전망은 중기전망에 기반하여 이후의 전망을 연장·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기 재정의 수입·지출과 재정수지의 신뢰성이 장기전망의 정확성과 직결¹³⁾
 - (중기) 별도 보고서로 발표되지 않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공식자료로서 장기재정전망 모형의 출발점(기준선)¹⁴⁾으로 활용됨
 - (장기) 예산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중기재정운용계획’의 5년 중기 재정전망 결과를 기준선으로 활용하여 정책 지속성 여부를 판단

□ 한편, 재정당국은 통합된 장기전망 결과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라 동일한 인구·거시경제 지표를 적용하여 재정총량을 전망

- (전망추진 체계 및 주체) 정부 기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야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위원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논의 및 결정¹⁵⁾
 -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계산이나 국세 수입 전망 등 장기재정전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다수 기관이 참여¹⁶⁾

12) 중·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포함하는 재정당국의 공식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3) 국가채무비율 또는 재정수지의 수십 년간의 추계 전망결과를 계산할 경우, 중기 재정수지 전망결과가 초기 궤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

14) 기준선(Baseline)은 장기재정전망 수행 시,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중기재정전망(통상 5년)의 수입·지출·재정수지 경로를 출발점으로 설정하여, 이후 장기 추계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재정 흐름의 경로(reference path)를 의미함

15) 2025년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공식 발표 문서의 확인이 어려워 기존의 제2차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하여 작성함. 다만,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는 현재 국가재정법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으로 재정운용전략위 산하 소위원회로 편입됨을 확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 2 신설('21.5),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의 훈령 제정('24.8))

16) ‘협의회(또는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및 기관, 공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전망결과 도출 및 공개 등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함. 이 중 관계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총량 등을 전망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재정전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전제는 통계청과 KDI가 각각 추계하고 사회연금보험의 수입·지출은 소관 중앙 및 공공행정기관이 추계함(감사연구원, 2022)

- **(전망대상 및 방법)**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큰 사회보험 등과 주요 세목의 장기전망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전망
 - (의무·재량지출) ‘의무지출’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망하고 ‘재량지출’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을 포함한 재정총량을 추계
 - (총수입·총지출) ‘총수입’은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수입으로 나누고,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¹⁷⁾로 구분하여 추계 후 합산
 - (중·장기 연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초기 5년간의 중기전망 반영 후, 항목별 전망치를 사용하여 장기재정을 전망
 - (전망전제) 인구전망(통계청)과 잠재성장을 등의 거시경제 변수(KDI)를 공통으로 적용
 - (시나리오 분석) 인구가정과 거시경제 전제에 따라 유형별로 분석 및 산출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¹⁸⁾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공개, 이외 별도의 진단지표 (또는 수단) 미활용

17)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사회보험 지출, 기초연금·기타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기타 의무지출 포함)에 해당하며,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임

18)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수단은 크게 4가지 수단 - ①현행 조세 및 지출구조의 장기전망, ②재무제표 활용, ③재정갭 분석, ④세대 간 회계 - 으로 구분됨(박노옥, 2022)

〈표 III-1〉 장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구 분	제1차('15년)	제2차('20년)
전망기초 (중기계획)	2015-2019	2020-2024
전망기간	2016-2060	2020-2060
거시전제 (경제/인구)	KDI 거시경제전망('14.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1.12월)	KDI 거시경제전망('20.3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3월)
지출 전망방법 (기본 시나리오)	재량지출증가율 = 경상성장률로 증가	총지출증가율 = 경상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	2개(기본, 세출구조조정)	3개(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민감도분석(6개)〉 - 악화요인(3개)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 ③ 저성장 리스크 - 개선요인(3개) ① 세출구조조정 ② 재정지출제한 ③ 성장률 제고	〈정책조합(9개)〉 - 정책(3개)과 시나리오(3개) 조합 - 정책(3개)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② 수입 확대 ③ 지출+수입
발간 형태 및 분량 ¹⁾	총 26장(보도자료 7p, 별첨 19p)	총 24장(보도자료 9p, 별첨 15p)

주: 1) 장기재정전망 관련 단독 보도자료 및 별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 및 발표자료 정리

2. 주요국¹⁹⁾

□ (미국, CBO)²⁰⁾ '65년 최초 시작으로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까지 10년간의 중기전망 결과와 연계하여 약 30년간의 장기재정을 전망

- (중기) 의회예산처(이하 CBO)는 매년 연방예산에 대한 10년 중기전망을 제공하며, 기준선은 현행 법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 (장기) 「의회예산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CBO는 경제 및 재정전망 업무 중 하나로 '09년 이후 매년 예산안 발표 후 보고서를 발간

19) 각 주요국의 공식보고서 및 보도자료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0)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 1974년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 의거하여 정부 재정정책 설정, 정책 우선순위 설정, 연례보고서 작성 및 필요에 따른 후속보고서 작성 등 상하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미국의 의회예산처를 가리킴

- (전망주체) CBO 내부에서 전반적인 전망을 실시하며, 노동·소득보장·장기분석실이 주도적으로 작업하되 타 부서와 협조하여 전망을 수행*

* 부서/분야 : 노동·소득보장·장기분석실(사회보장지출 및 장기재정전망), 예산분석실(인구및경제), 조세분석실(수입)

- (전망전제) CBO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예산 및 경제 중기전망과 인구전망을 활용²¹⁾
 - (중·장기 연계) 최초 10년간의 기준선을 확장한 이후, 항목별로 별도 가정하여 장기재정을 전망
- (전망방법) 자체 전망모형(CBOLT)²²⁾을 이용해 각 항목을 추계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부채를 전망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추가적인 시나리오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별도의 지표는 미활용
 - * (민감도 분석 요소) 총소요생산성, 이자율, 경제활동참가율, 의료비 등

□ (미국, OMB)²³⁾ '96년 최초 시작으로 「Analytical Perspectives」를 통해 10년간의 중기전망 결과와 연계하여 약 25년간의 장기재정을 전망

- (중기) 행정부 관리예산국(이하 OMB)은 연방예산에 대한 10년 중기전망 결과를 별도의 보고서로 매년 발표
- (장기) 「의회예산법」 및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OMB는 잠재적 재정위험의 사전관리를 위해 매년 초 발표되는 예산분석보고서에 장기전망 결과를 별도로 수록하여 발표
 - (전망주체) OMB 내부에서 전반적인 전망을 실시하며, 예산심사국(Budget Review)이 주도적으로 작업하되 타 부서와 협조하여 전망을 수행
 - * 부서/분야 : 예산심사국(거시, 대통령 예산안, 장기재정전망), 사회보장 보험수리국(인구, 사회보장)
 - (전망전제) OMB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의 거시전망과 사회보장국이 발표하는 사회보장 재정보고서의 인구전망의 중위 가정을 반영²⁴⁾
 - (중·장기 연계) 예산안의 초기 10년 중기전망과 연계 이후, 장기재정을 전망
 - (전망방법) 자체 전망모형을 이용해 전 분야를 추계하며 연방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 순이자지출, 재정수지, 채무 등 전망

21) CBO는 거시·경제 및 인구전망을 위해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과 「The Demographic Outlook」을 매년 발표

22) CBOLT(Congressional Budget Office's Long-Term Model) : 인구통계학적 모델,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 장기예산 모델 및 정책성장 모델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장기예측을 위해 만들어졌음(오영민, 2022)

23)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 및 관리와 정책평가를 담당하는 미국 행정부의 관리예산국이며, 의회를 지원하는 CBO와 달리 행정부를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

24) 예산안인 「Budget of the U.S. Government」와 사회보장재정보고서인 「Social Security Trustees' Report」를 참고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추가적인 시나리오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별도의 지표는 미활용
* (민감도 분석 요소) 생산성, 의료비, 재정지출 등

□ (캐나다, PBO)²⁵⁾ '10년 최초 시작으로 최근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4」를 통해 약 75년간의 장기재정을 전망

- (장기) 법령상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OECD 권고사항과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전망결과를 보고서로 발표
 - (전망주체) 의회 직속기구인 의회예산처(이하 PBO)가 전반적인 전망을 모두 수행하며 타 부서와 협조*
* 부서/분야 : 연방금융감독원 내 연금수리실(연금부분)
 - (전망전제) 캐나다 통계청 자료 및 PBO의 중기전망을 활용한 거시전망과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반영²⁶⁾
 - (중·장기 연계) 거시경제 및 연방정부의 경우 PBO의 '경제 및 회계전망'에 기반하며,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당해 연도 예산 예측과 일치시킨 후, 장기재정을 전망
 - (전망방법) 연방정부·지방정부·연금부문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자체모형을 이용해 각 항목을 추계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추가적 시나리오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단지표로 재정갭(Fiscal gap)²⁷⁾을 활용
* (민감도 분석 요소) 인구(합계출산율, 기대수명, 이민율 등), 경제(실질 GDP 성장률, 이자율 변화), 재정정책(노인 및 아동급여 GDP 성장률 연동, 초과의료비 증가율, 목표 부채비율 변화 등)

□ (영국, OBR)²⁸⁾ '11년 최초 시작으로 최근 「Fiscal risk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4」에서 5년간의 중기전망 결과와 연계하여 약 50년간의 장기재정을 전망

- (중기) 예산책임청(이하 OBR)은 5년 간의 중기 경제전망 결과를 「경제재정전망(EFO)」²⁹⁾을 통해 매년 별도의 보고서로 발표

25)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r) : 캐나다 의회를 지원하며 연방정부 예산, 재정정책, 경제전망 등을 독립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며, 행정부와 별개의 독립적 기관으로 미국 CBO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26) 캐나다 통계청의 정부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PBO의 경제 및 회계 중기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EFO),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전망(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을 반영

27) 재정갭(fiscal gap) : 정부의 장기 재정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향후 발생할 모든 재정수지 불균형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출됨(IMF, 2023; OECD, 2022)

28) OBR(Officer for Budget Responsibility) : 영국 정부와 의회를 지원하며 재정정책, 예산 및 경제전망을 독립적으로 분석 및 수행하며, 정부 정책집행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미국 CBO와 캐나다 PBO와 유사하게 의회 및 정부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

29) EFO(Economic and Fiscal outlook) : OBR이 매년 발간하는 중기전망 보고서에 해당

- **(장기)** 「예산책임 및 감사법」³⁰⁾에 근거하여 장기전망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의무로 제출
 - (전망주체) OBR은 여러 부처(국세청, 노동연금부, 재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의 협조 아래에 정보를 제공받아 장기전망을 실시
 - * 부서/분야 : 재무부(거시경제모형의 공동관리 및 개발 수행)
재무부·국세청·노동연금부(거시경제 및 예측분석 모형 설계 정보 제공)
 - (전망전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전망과 경제재정전망(이하 EFO)의 거시·경제 중기전망을 반영
 - (중·장기 연계) 초기 5년까지 EFO의 결과를 연계한 이후 수입과 지출, 이자지출을 제외한 장기전망을 실시
 - (전망방법) 상향식 추계방법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재정수지, 순이자, 공공부채를 전망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이외 재정갭(Fiscal gap)과 기간 간 재정갭(Intertemporal budget gap)³¹⁾을 활용
 - * (민감도 분석 요소) 경제 및 재정에 충격을 주는 요인(경기침체 발생 여부)

□ (호주, 재무부)³²⁾ '98년 최초 시작으로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까지 5년간의 중기전망 결과와 연계하여 약 40년간의 장기재정을 전망³³⁾

- **(중기)** 연방예산에 대한 5~10년 중기 재정을 전망하나, 별도의 보고서로 발표되지 않으며 내부의 예산 정책 문서에 포함되어 활용³⁴⁾
- **(장기)** 「공정예산헌정」에 근거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2~6년의 주기로 수행한 전망결과를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전망주체) 재무부의 주도하에 분야별 전망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종합
 - (전망전제) 최신 발표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재무부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산출한 거시전망을 사용하며, 최신 인구 보고서의 인구전망을 활용

30) 예산책임 및 감사법 : 「The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31) 기간 간 재정갭(Intertemporal budget gap)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정부의 장기 재정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는 대표 지표 중 하나이며, 정부가 현재부터 미래에 걸쳐 모든 예정된 지출과 수입을 고려했을 때, 재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재정조정(증세 또는 지출 삭감)의 크기를 나타냄

32) 호주 재무부의 공식명칭은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DOT)이며, 호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임

33) 호주(재무부)는 지난 '23.8월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을 발표했으며, 본 보고서는 총 6번째 발간에 해당함

34) 호주(재무부)는 중기재정전망 결과를 별도의 문서로 공개하지 않으며, 반기 경제 및 재정보고서의 구성요소로 반영 후 장기재정전망의 분석에 활용한 다음에 IGR 보고서와 함께 통합하여 발표

- (중·장기 연계) 연방정부의 내부 예산자료로 구성되어 발표하는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³⁵⁾의 초기 5~10년까지 중기전망을 연계한 이후, * 장기재정을 전망

* IGR 2023(‘23.6)은 중기 약 10년까지에 대한 추정을 반영하여 향후 4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

- (전망방법) 연방정부(지방정부 제외)를 대상으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각 분야별 전망을 추계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민감도 분석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진단지표로 재정갭(Fiscal gap)을 활용

* (민감도 분석 요소) (‘21년) 순이민자수/노동생산성/국채금리 변화, (‘23년) 국채금리/NDIS 성숙도

□ (일본, 내각부)³⁶⁾ ‘02년 최초 시작으로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을 통해 약 10년간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연 2회(1,7월 발표)에 걸쳐 결과를 발표

- (중·장기)³⁷⁾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내각부는 「경제재정 운용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방침」³⁸⁾을 근거로 수행한 전망결과를 경제재정자문회의³⁹⁾에 제출 후, 내각부 홈페이지에 게시

- (전망주체) 내각부 정책총괄관에서 전망 전반을 총괄하며, 실무는 정책총괄관 내 계량분석실에서 수행

* 부서/업무 : 정책총괄관 경제사회시스템(중장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책총괄관 계량분석실(실무 등의 경제재정분석을 담당)

- (전망전제) 거시경제는 경제재정모델에서 내생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활용하며, 인구·노동 전제는 장래인구추계의 전망결과에 외생변수를 적용하여 산출

- (전망방법) 자체 경제재정모델(거시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세입·세출을 전망하나, 전망대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부항목이 상이*

* 전망범위 및 항목 : 중앙정부(일반회계/양여세배부금 특별회계/교부세 등), 지방정부(일반회계/재정계획 등)

- (장기전망 이외 지속가능성 진단 여부)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중·장기전망을 시산하며, 별도의 지표는 미활용

* (민감도 분석 요소) 잠재성장률, 명목장기금리 등

35) 호주는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에 따라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YEFO)」 보고서를 법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중기 경제·재정전망(5~10년)을 업데이트된 형태로 반기 단위로 공개 중임

36) 일본 내각부는 정부의 정책 조정, 장기재정전망 작성, 국가전략 기획 등을 담당하며,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 보고서인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을 발표함. 다만, 올해의 경우 7월이 아닌 8월에 발표되었으며(‘25.08.07. 기준), 이전까지는 보통 7월 말에 발표됨

37) 일본 중기 재정전망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의 형태로 수행되며 별도의 중기 재정계획 체계와 장기전망을 분리하지 않음

38) 일본은 본 기본방침을 근거로 2002년 「구조개혁과 경제재정 중기전망」으로 첫 재정전망을 시행함

39) 경제재정자문회의 : 일본 내각 총리대신 직속의 최고 경제정책 자문 기구로 경제·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조정하고,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기 및 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EU, EC)⁴⁰⁾ 회원국의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Ageing Report (’01~)」와 부속보고서인 「Debt Sustainability Monitor(’09~)」을 통해 약 50년 이상의 전망결과를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회원국에 대한 재정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년 기존의 분석방법 및 진단지표를 개편하여 위험수준 평가결과를 구체화⁴¹⁾
 - S1의 시간범위를 2070년까지 확대해 S2와 연계함으로써 장기 지속가능성 평가를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보조하여 평가 체계를 강화

〈표 Ⅲ-2〉 S1 및 S2 지표 개편 사항(비교)

항목	기존 정의	개편 정의
S1 지표	▶ 중기 재정 위험 측정 - 향후 15년간 정부 부채를 GDP 대비 6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누적 구조적 기본재정수지 조정 요구량을 측정	▶ 장기 재정 위험 보완 용도로 확장 - 207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로 수렴시키기 위한 재정조정 노력 측정 - S2와 유사한 장기 시간 범위 반영
S2 지표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측정 - 무한대 기간 동안 부채 안정화에 필요한 영구적 구조적 기본재정수지 조정량 및 고령화 비용 포함	▶ 변경 없음(기존과 유사) - 장기간 부채 안정화에 필요한 구조조정 노력과 고령화 비용 반영
시간	- S1: ~15년 - S2: 무기한 / 장기	- S1: ~2070년까지(장기 시간 범위 확장) - S2: 기존대로 무한대
결합 활용	▶ S1(중기), S2(장기) 각각 별도 활용	▶ S1과 S2를 결합해 장기 평가의 종합 보조 지표로 활용 - S1은 초기 부채 과열 위험을, S2는 고령화·영구 구조 부담을 보완적으로 평가

자료: EC(2023)

40) EC(European Commission) : EU(유럽연합)의 행정기관으로 집행기능을 담당

41) EC는 개편된 S1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Revised S1 fiscal sustainability indicator)를 도입하여, 2070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로 수렴시키기 위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조정 규모를 산정함. 나아가 기존의 S2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S2 fiscal sustainability indicator)는 무한 시계열을 전제로 한 장기 부채 안정화 노력 규모를 측정하며 노령화 비용과 초기 재정 상태를 함께 고려함(EC, 2023).

- 한편, EU는 「안정성장협약 및 안정성 수렴프로그램의 집행지침」⁴²⁾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수행
 - (전망주체) 경제정책위원회(EPC) 내에 설치된 고령화워킹그룹(AWG)이 수행⁴³⁾
 - * 부서/업무 : 경제정책위원회(EC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의 분석 틀 설정 및 감독)
고령화워킹그룹(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추정, 공통 시나리오 및 방법론 개발 등)
 - (전망전제)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인구 추계와 고령화워킹그룹(AWG)가 합의한 거시경제 가정(고용률, 생산성, 물가, 이자율 등)을 공통 가정으로 하여, 28개 회원국 모두에 동일한 모델과 시나리오를 적용
 - (중·장기 연계) DSA의 중기전망 10년 결과에 기반하나 단순히 적용하지 않으며⁴⁴⁾ S1 및 S2 지표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국가별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
 - (전망방법) 회원국의 일반정부 공공지출(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의 분야별(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교육/실업급여 등) 전망결과를 종합하여 발표
 - * 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의 구분 전망치는 미제공
 - (지속가능성 진단여부) S2 지표를 기본으로 S1 지표가 S2 보다 높은 위험 등급이면 한 단계 악화시켜 최종 등급을 결정⁴⁵⁾

〈표 III-3〉 EU 지속가능성 분류 : S2 및 S1 지표 종합 결과

구 분	해당 국가 사례
고위험 (High)	벨기에(BE), 룩셈부르크(LU), 몰타(MT), 슬로바키아(SK)
중위험 (Medium)	체코(CZ), 아일랜드(IE), 스페인(ES), 프랑스(FR), 이탈리아(IT), 오스트리아(AT), 폴란드(PL), 루마니아(RO), 핀란드(FI), 리투아니아(LT), 헝가리(HU), 네덜란드(NL), 슬로베니아(SI), 독일(DE)
저위험 (Low)	불가리아(BG), 덴마크(DK), 에스토니아(EE), 그리스(EL), 크로아티아(HR), 키프로스(CY), 라트비아(LV), 포르투갈(PT), 스웨덴(SE)

자료: EC(2025)

42)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21조(다자간 감시) 및 제126조(과도한 적자 절차)에 기반하며, EU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주요 법적 틀을 제공함. 한편, 회원국들은 SGP지침에 따라 매년 제출하는 중기 재정구조 계획(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MTFSPs)에 국가별 재정정책의 중기적 목표와 전략을 명시함(EC, 2023).

43) AWG(Working Group on Aging Populations and Sustainability) : ‘고령화워킹그룹’으로 유럽연합의 경제 재무이사회의에 의해 설치된 경제정책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해당하며, 회원국의 재무부 또는 EC의 담당자가 참여하고,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자문 기능을 수행(EC, 2023).

44)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는 중기 부채 경로 예측과 리스크 분석을 위한 핵심기술 도구로써, 향후 10년간의 GDP 및 물가를 전망하고 AWG의 고령화 지출 예측, 이자율 등의 데이터 활용을 제공함(EC, 2023).

45) S2는 장기(무한(∞) 수평) 기준으로 공공채무를 안정화하려면 얼마나 구조적 재정균형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반면에 개편된 S1은 2070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조정 노력을 하며, S2와 유사한 장기 지향성을 포함함(EC, 2023)

〈표 Ⅲ-4〉 국내·외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요약)

주요국		한국	미국 CBO	미국 OMB	캐나다
근거법		국가재정법 제7조	의회예산법		법적근거 없음 (OECD 권고, 주요국 참고)
				사회보장법	
전망주체 (거버넌스)		장기재정전망소위원회 (舊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문기관 협동)	CBO 주도 내부전망	OMB 주도 내부전망	(총괄) 의회예산관실 (협조) 연금수리실
최초 시기		2015년~	1996년~	1996년~	2010년~
전망주기	기간	40년	30년	25년	75년
	발표	5년	매년 (예산안 발표 2~3개월 후)	매년	매년
전망전제	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3년 주기)	CBO 자체 전망모형 (매년)	SSA(사회보장국) (매년)	통계청
	거시	KDI 「거시경제전망」	CBO 자체 전망모형 (매년)	OMB 자체 전망모형(매년) 「Budget of the U.S. Government」	통계청 및 의회예산관실
전망 범위 및 특징		중앙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	연방 및 지방정부
전망방법		(공동) 인구거시전제 활용 (분야별 종합) 8개 기관	CBOLT 자체모형 활용 (각 항목 전망)	OMB 자체모형 활용 (전 분야 추계)	PBO 자체모형 활용
중기연계		5년	10년	10년	-
보고서/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포함)	「Long-Term Budget Outlook」	「Analytical Perspectives」 (대통령예산안에 포함)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진단지표		-	-	-	재정갭
최근 발표		'25.9월 발표	'25.3월 발표	'24.3월 발표	'24.8월 발표
주요국		영국	호주	일본	EU
근거법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	공정예산헌정	법적근거 없음 (경제재정 운용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법적근거 없음 (EU 안정성장협약 및 안정수렴 프로그램의 집행지침)
거버넌스		(총괄) 예산책임청 (협조) 국세청, 재무부, 노동연금부 등	재무부 주도	내각부 정책총괄관 주도	경제정책위원회, 고령화위킹그룹
최초 시기		2011년~	2002년~	2002년~	2001년~
전망주기	기간	50년	40년	10년	50년도 이상
	발표	매년 or 격년	2~6년	연 2회 (1월 : 실적치, 7월 : 추경)	3년 주기
전망전제	인구	통계청	정부 최신인구 보고서 「Population Statement」	사회보장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 장래인구추계」	각 회원국 통계청, 유럽연합 통계청
	거시	예산책임청	재무부 거시계량 모형	내각부 자체 전망모형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개발)	고령화위킹그룹
전망범위 및 특징		공공부문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포함)	연방정부에 국한 (주/지방정부 예산 미포함)	중앙 및 지방정부	27개 회원국의 일반정부 지출
전망방법		중기전망 동일 상향식 추계	중기전망 기반 거시계량모형 결합·활용	경제재정모델 활용	자체모델 활용 (회원국 전체 적용)
중기연계		5년	5년	-	-
보고서/자료		「Fiscal risk and Sustainability Report」	「Intergenerational Report」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의 참고자료	「The Aging Report」 : Debt Sustainability Monitor
진단지표		재정갭 기간 간 재정갭	재정갭	-	S1, S2
최근 발표		'24.9월 발표	'23.8. 발표	'25.8월 발표	'25.3월 발표

주: 각 주요국의 공식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앞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은 중·장기 재정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와 특성(전망방법 등)을 부분 활용하여 전망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별 전망 주기·기간·방법 등은 상이
 - 해외 주요국은 독립적 상설기구 또는 재무부 중심으로 재정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국회(또는 공공)에 제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반면, 한국도 중·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나, 협업 구조(8대 기관)의 운영체계, 재정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 활용 여부, 결과의 공개 형태·방식 등에서 해외사례와 차이가 있음

□ 현행 국가재정의 세입·세출 구조와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분석 및 평가하는 작업은 재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

- 재정전망은 현행제도가 변경 없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 재정위험을 정확히 예측(prediction)하기보다 진단하고 알리는 것(projection)에 의의
- 다만, 전망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추계 오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가정 및 전제 등의 설정에 따라 전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 우리나라 역시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으나, 향후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만큼 전망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

□ 이에 중·장기 재정전망과 지속가능성 진단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객관적인 전망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

- 무엇보다 미세한 정책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되도록 운영·활용하는 것이 중요
- 또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전망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개선점을 검토 및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참고문헌

● 한국

- 감사연구원. (2022).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운영실태 및 주요 이슈분석. 연구보고서 2022-015.
- 국회예산정책처. (2025).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6). 정부차원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 체계 마련 필요('11.06.22.).
- _____. (2015.12). [별첨] 2060년 장기재정전망('15.12.04.).
- _____. (2020.9). [별첨]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09.03.).
- _____. (2024.8).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24.08.27.).
- _____. (2024.9). 재정준칙 법제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24.09.08).
- _____. (2024.12). 세계국채수지 편입과 부담금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논의('24.12.17.).
- _____. (2025.1). '25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산출기반 강화 지속 추진('25.01.22.).
- _____. (2025.3).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생산성 제고로 적극적 역할 수행…('25.03.25.).
- _____. (2025.5).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5.05.01.).
- _____. (2025.6).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원 규모 새정부 추경 편성('25.06.19.).
- _____. (2025.8).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25.08.29.).
- 김용식. (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박노욱. (2022). 재정준칙 도입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시연구과제 2022-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미국(CBO)

- 오영민. (2022).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전망방법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CBO. (2025).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5 to 2055.
- CBO 홈페이지. www.cbo.gov

● 미국(OMB)

OMB. (2024). Analytical Perspectives.

OMB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

● 캐나다

Canada. (2024).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4.

Canada. (2024).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

캐나다 의회예산감독관 홈페이지. www.pbo-dpb.ca

● 영국

OBR. (2024). Fiscal risk and sustainability report 2024.

영국 재무부 홈페이지. www.obr.uk

●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 Intergenerational Report 2023: Australia's future to 2063.

호주 재무부 홈페이지. www.treasury.gov.au

● 일본

내각부. (2025)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www.cao.go.jp

● EU

EC. (2023).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2.

EC. (2025). Debt Sustainability Monitor 2024.

EU 홈페이지. www.economy-finance.ec.europa.eu

● 기타

IMF(2023). Fiscal Monitor 2023.

OECD(2022). Economic Outlook 2022.

FIS 재정리포트 25-01

국가신용등급 결정 요인 분석

FIS 재정리포트 25-02

중·장기 재정전망 사례